

韓, 재판관 2명 지명…민주, 권한쟁의·가처분 신청

문형배·이미션 재판관 후임자 지명…이완규·함상훈 보류했던 마은혁 임명…헌재 9인 완전체 구성될 듯
대통령 권한 행사 논란 전망…대통령 몫 지명 어려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달 퇴임하는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임을 지명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고유 권한에 해당하는 대통령 몫 재판관 후임을 지명할 수 없다는 해석이 다수설인데도 인사권을 행사해 향후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션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

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현재 결원 상태가 반복돼 현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주경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헌법은 재판관 정원을 9인으로 하고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가 3명씩 지명하도록 정한다. 두 재판관은 2019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대통령 몫이다.

대통령 몫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동의 없이도 임명이 가능하다. 통상 인사청문회 과정이 한 달 정도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선 전에 임명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도 이날 임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지난해 10월 당시 이종석 헌재소장·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퇴임 이후 처음으로 9인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과정을 놓고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한 지적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회범 변호사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은 주권자인 국민이 부여하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며 “비상시 부득이 직무를 대행하는 임명직 총리나 장관은 현상을 유지하

는 권한 행사만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이완규 법제처장 등 헌법재판관 지명을 두고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처분 신청과 같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번 건은 내란 세력, 진존 세력에 의한 현재 장악 시도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위헌적인 권한 남용을 행사했기 때문에 지명 자체가 원천 무효로 판단돼 이에 대한 법률 검토를 충분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대통령이었을 때 국무총리였던 한덕수가, 탄핵이 진행된 이후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인사를 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라며 “국민들은 목과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뉴시스

광주시의회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개통 지연 우려”

광주시의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개통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특별전문위원실은 지난 7일 발간한 예산정책리포트를 통해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시공사 관계자는 ‘2026년 말 개통은 반반이다. 1년 이상 더 늦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고 밝혔다.

특별전문위원실은 “도시철도건설 본부가 제시한 공정률 87%는 토목 공사일 뿐, 이 외 건축, 전기, 통신, 신호 등 공사를 감안하면 1년 이상 늦춰질 수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특별전문위원실은 “토목공사 공정률만으로 2026년 말 개통을 강조해서는 안된다”며 “삼대인을 너무 일찍 터트리기보다 시민의 기대치를 낮춰야 한다”고 광주시에 제안했다.

도시철도 공사 구간의 도로 원상복구가 늦어지는 이유는 정거장 건축공사 지연을 꼽았다. 일부 정거장 공사가 설계도서 간 불일치로 지연된다는 것이다.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2호선의 실상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기정 시장, 대선 출마
홍준표 대구시장에 쓴소리

강기정 시장이 지난 7일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헌법재판소 폐지 요구는 잘못된 것”이라며 쓴소리를 했다.

강 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저와 함께 손잡고 달빛별도법, 군공항 특별법 제정 등으로 광주와 대구 사이에 큰 성과를 이끌어 주셨는데, 시정을 떠나신다니 맘같이 교차한다. 그동안 감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늘 시장님의 헌법재판소 폐지 요구는 아무래도 잘못된 진단에 따른 잘못된 처방 같다”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갈등과 정쟁을 일으킨 것은 현재가 아니라 윤석열의 계엄이었고, 박근혜의 국정농단이었기 때문이다. 솔직히 저도 탄핵 선고가 늦어질 때는 현재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번 판결을 지켜보니 현재는 ‘헌법 수호정’이 분명해 보인다”고 반박했다.

강 시장은 “지금 우리가 결별해야 할 대상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내란 세력이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이날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간부회의를 갖고 “이제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금요일 사퇴하려고 한다”며 조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대선 공정관리 중립내각 구성’ 촉구 기자회견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비상시국회의 상임고문단·상임대표단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내란세력 한덕수, 최상목 사퇴 촉구 및 선거 중립 내각 구성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남 공보의 1년 새 25% 감소… “의료 공백 우려”

의과·치과·한 의과 공보의 지난해 534→올해 477명
의정갈등 속 현역행·복무 종료·타지역 진출 3종고

전남 농어촌 주민 건강의 최후보루인 공중보건의가 해마다 크게 줄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의대 전형 다각화 등을 통한 지역 의사 확보와 의료취약지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보건시스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남 농어촌 지역에서 1차 의료와 공공보건 업무에 종사할 공보의 194명을 신규 배치했다. 이로써 전남 공보의는 총 477명으로, 지난해 534명보다 57명, 비율로는 10.7%나 감소했다.

의과가 229명에서 179명으로, 한의과가 199명에서 190명으로 각각

50명과 9명 줄어든 반면 치과는 106명에서 108명으로 2명 늘었다. 의과 공보의 기준으로 2010년 479명이던 것이 15년 만에 3분의 1로 가파르게 감소한 셈이다.

인구 감소, 저출산 풍조와 별개로 의정 갈등 속에 복무기간이 3년으로, 일반현역병의 2배에 달해 현역 임명을 택한 전공의들이 급증한 점도 악재로 작용했다.

사직 등으로 수련과정이 중단되면 즉시 임대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올해 전공의 3300명이 임명 대상자로 대거 분류되면서 2023년 904명, 2024년 642명이던 병무청 공보의 선발인원은 올해는 250명으로 급감했다. 지난해의 38% 수준이다.

이에 따라 지역에 배치되는 인원

역시 크게 줄어든 반면 복무 종료로 사회에 복귀하는 전남 공보의만 76명에 달하고, 타 지역 전출도 40여명에 달해 수급 불균형에 따른 공보의 인력난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보건지소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못하는 악순환 되풀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전남 보건지소 216곳 중 의과 공보의가 상주하는 곳은 133곳(62%)에 불과하고 76곳은 순회 진료로 운영 중이다.

전남도는 대책 마련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우선, 도서지역 보건지소에는 공보의를 2명씩 배치, 24시간 근무가 가능토록 하고 육지는 먼 단위 의료기관 중 공보의가 없는 곳에 우선 배치하는 응급처방을 내렸다.

마배치 된 곳엔 순회 진료와 전국 최초 비대면 진료로 힘겹게 의료공백을 메꿔 나가고 있다.

/김 호 기자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해야…청문회 요청 안 받을 것”

우 의장 “한덕수 재판관 지명은 모순…사과부터 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이완규 법제처장 등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받지 않겠다면서는 국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긴급 입장문을 통해 “한 대행은 사과부터 하고,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한 대행은 오는 18일로 임기

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션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대통령 권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한 대행은 그동안 국회

가 선출한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이 제정한 대법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무시하며 임명을 거부해왔다”라고 했다.

이어 “국회와 현재를 무시하며, 헌법상 의무, 법률상 책임도 이행하지 않은 권한대행이 부여하지도 않은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사과부터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임시 지위인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권한대행 스스로 주장해온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영록 대선 불출마…“이재명 중심 단일대오”
“정권 교체 위해서는 국민과 함께 하는 하나 된 민주당”

김영록 지사가 8일 조기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하나된 민주당이 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라며 “내란의 혼란 속에서 빛의 혁명과 국민의 승리를 이끌어낸 이재명 대표가 시대 정신을 대표한다는 신뢰와 믿음으로 함께 동행하겠다”라고 밝혔다.

호남의 대권주자를 표방한 김 지사는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바 있는 대 당초 입장에서 선회해 불출마를 선언하며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다.

김 지사는 “저는 이제 민주당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민주개혁 세력의 승리를 위해 헌신하고자 한다”라며 “정권이 교체되어야 내란종식도 가능하고 국민통합의 길도 열리

는데 이러한 시대정신의 최종심에 이재명 대표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권 교체를 위해서 국민과 함께하는 하나 된 민주당이어야 한다”라며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지방선거 출마 등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정에 열심히 집중하면서 전남 발전을 위해 계속해 매진할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도지사 책무도 있고 이 시대의 흐름과 시대정신 최종심에 있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하면서 호남 발전을 꾀하는 것이 오히려 호남 분열이 더 바라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 호 기자

이재명, 오늘 당 대표직 사퇴…조기 대선 채비

대선 출마선언은 다음 주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9일 당 대표직에서 사퇴하고 대선 채비를 본격화한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8일 “이 대표가 내일(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당 대표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6월 3일을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확정하면서 이 대표도 조기 대선 채비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사퇴 이후 당내 경선 캠프 인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선 캠프는 계파를 아우르는 통합형울

콘셉트로 소규모로 꾸렸다. ‘일국 체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선대위원장은 5선이자 이해찬 계로 꼽히는 윤호중 의원이 내정됐으며 계파색이 상대적으로 얇은 3선 강훈식 의원이 총괄본부장을 맡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한병도·박수현 의원의 합류도 사실상 확정됐다. 당직을 맡고 있는 진명계 인사들은 대선 본선 단계에서 대거 합류할 전망이다.

공식 출마 선언은 다음 주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김두관 “어대명은 정권교체 장담 못해”

원전개방형 경선 촉구…대선 출마 후 첫 행선지 광주 방문



더불어민주당에서 첫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의원이 8일 광주를 방문해 ‘어대명(어차피 대선은 이재명) 경선’으로는

정권 교체를 장담할 수 없다며 완전 개방형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대명 경선은 민주당의가 아니다. 정권교체를 하더라도 시대적 과제인 국민통합 정치와 개헌을 실현할지 의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2년 저는 일국 패권 정치의 광풍속에서 조통당하며 정치

인이 소신을 지키는 게 얼마나 고단한 일인지 잘 알고 있다”며 “변방의 작은 다윗이 어떻게 거대한 패권 정치의 강고한 벽을 깨트리는지 보여 주겠다”고도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제7공화국을 열 수 있는 개헌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이번 대선은 불순한 세력이 다시는 민주공화국의 소중한 가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헌법을 개정할 절호의 기회”라며 “제7공화국을 여는 것이 정치혁명의 길이자 사회대개혁의 시작이다. 제7공화국 정부는 실질적인 주권재민, 국민권력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권 민주주의 시대를 제안하며 국회의 입법권 남용도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도기 기자

안철수 대선 출마선언…“이재명 이길 후보”

“윤과 단일화한 사람으로서 깊은 사과…계엄은 잘못”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저는 이재명을 넘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며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고 “국민은 ‘이재명 민주당’에 정권이 넘어갈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 단일화를 했던 사람으로서 깊은 반성과 사과를 드린다”며 “계엄은 잘못된 것이었고, 헌법재판소 판결에 명백하게 나타난 것처럼 재판관의 권한 행사를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권한대행 스스로 주장해온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안 의원은 “경제와 일상을 복구하고, 잘못된 과거를 일소하는 시대

교체가 필요한 때”라며 “윤석열 정권의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반성과 혁신을 기본으로 국민통합에 적극 나서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국민은 이재명 민주당에 정권이 넘어갈까 두려워하고 있다”며 “안철수만큼 민주당을 잘 아는 사람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중대선거구제 추진 ▲신(新)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AI 인재 100만명 양성 ▲연금·교육·노동·의료·공공의 5대 개혁 등을 공약했다.

